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3년 3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3년 3월 9일 ~ 2013년 3월 29일

주요 키워드

- 1. 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무더기 사법 처리** : 동아제약으로부터 최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이 사법 처리됐으며 1300여명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들도 있었음.
- 2.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건보공단 勝** : 대법원이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줌.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임의적으로 판단해 처방했다라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임.
- 3. 기타** :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려, 과다 본인 부담금 정부가 우선 지급 방안 추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둔화추세, 복지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 확대, 서울시 2012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평가, 90% 이상 만족, 복지부, 의료기기 해외종합지원센터 구축 추진, '2013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6개 의료기관 신규 선정, 복지부, 신약개발 전문 특수목적법인 설립 검토

1. 보건의료정책

○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건보법 개정안 발의 (3. 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공약대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에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대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모두 급여화될 수 있으며, 수술 환자에게 상급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복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익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보험적용 방법을 마련키 위해 치과계를 비롯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3. 12)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새 정부와 진영 복지부 장관에게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등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 75% 수준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수치"라며 "현재 정부의 수정 방안은 중증질환 본인부담의 최대 30% 정도를 경감해주는 정책이다. 여기에 간병비가 포함되면 경감폭은 최대 25%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TF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세부 계획이 상반기 내로 발표될 것이라 밝혔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과 관련,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비급여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환자가 반강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비급여 항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절감방안 발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다 본인 부담금 정부가 우선 지급 방안 추진 (3. 14)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 했을 때 정부가 환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1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환불했다. 또,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루는 경우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만을 나타냈다. 이목희 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통해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이 가입자에게 우선 환불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을 공제 처리하는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분석 연구용역 공모 (3. 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해 부과체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지역간 소득·연령·성별 등 경제적 특성을 비교·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한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보수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 시 보수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요소가 달라진다. 공단은 "현재 사회·경제적 환경 및 소득수준이 변화됐고, 2003년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으로 지역간 가입자의 특성도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지역간 경제적 특성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체계의 특성을 분석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둔화추세 (3. 17)

연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해 5% 이하로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건강보험 주요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47조8392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2006년~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가(2008년 제외)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수치다. 공단은 경기 둔화 및 약가 인하 효과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급여비도 진료비와 같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7조3341억원으로 전년도 36조560억원보다 3.5%(1조 2781억원) 증가했다. 건강검진비는 9598억원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는데, 이는 요양급여상대가치점수 당 단가 상승과 지급건수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 이후 지원금의 급여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2012년 진료비는 2104억원으로 전년대비 26.4% 증가했다. 중별로는 ▲종합병원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46억4000만원 ▲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9억5000만원 ▲약국 4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

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545원으로 전년(7만8424원) 대비 2121원(2.7%) 늘어났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6321원으로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2배이며, 전년 대비 8955원(3.6%)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에서 2012년 34.4%로 7년간 10%p가 늘어났다.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차단 법안 발의 (3. 18)

개인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강제 입원시키는 일들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사회복지 훈련을 받고자 할 때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허락하면 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산 다툼과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일이 되풀이 됐다.

○ '2013 보건의료대토론회' 개최 (3. 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오는 18일 오후 2시 '2013 보건의료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보건의료분야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향후 5년간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8개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은 다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송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외국인 정주 인구, 수요성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병원 설립에 메리트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의료가 94%를 차지해 병상 과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공급을 또 다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확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제한적으로 설립해 시범운영해 보자고 했던 종전의 입장을 뒤엎은 것이어서 복지부의 향후 정책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 과장은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면 의료인, 병원, 환자 입장에서 모두가 원하는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가장 효과적인 기준 안에서 100% 보장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과장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과 폐쇄는 지자체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복지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다만)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면서 환자안전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분야 정부, 학계, 노동계, 직능단체, 시민사회가 망라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건의료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각 직능분야 별 개혁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 노인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3. 20)

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의 하향선을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하고, 등급판정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다. 이번 조치는 치매, 중풍 등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잦은 갱신조사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앓는 환자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이 상~75점미만에서 51점이상~75점미만으로 완화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 원칙을 유지하되 연속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는 경우 1등급은 3년, 2~3등급은 2년을 부여한다. 3등급 기준 완화에 따라,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이는 2만 3000여명이 신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

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설치 지원 확대 (3. 22)

정부의 산부인과 설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전라남도 고흥군(고흥종합병원), 경상남도 밀양시(제일병원), 경남 거창군(거창적십자병원) 등 3개 지역을 신규 선정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의 수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이번 사업 확대로 총 10개 시·군이 정부 지원 산부인과의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10억원) 및 운영비 등 올해만 총 12억 5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충청북도 영동군(영동병원), 전남 강진군(강진의료원), 경상북도 예천군(예천권병원), 경북 울진군(울진군의료원), 강원도 삼척시(삼척의료원) 등 5개소가 분만 산부인과의를 운영 중이며, 강원 영월군(영월의료원), 경남 합천군(합천병원)은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산전 진찰 서비스,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지원,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비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매년 지원받고 있다.

○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 (3. 22)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가깝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신속히 개편해야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을 이같이 꼬집었다.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직장인으로 구분돼 수입이 많아도 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이외 자영업자·은퇴자 등은 종합소득, 자동차, 재산 등에 보험료가 매겨져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민들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현 부과체계를 버는 만큼 내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소득은 현행을 유지하고 근로의 소득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일정률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고지원율을 20%까지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면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괄 개편에 있어 소득부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으나 논의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7개 요양병원 첫 의료기관 인증 부여 (3. 26)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효사랑전주요양병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가족사랑요양병원, 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서울요양병원, 근로복지공단경기산재요양병원 등 7개 요양병원에 첫 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고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문화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첫 인증을 획득한 7개 요양병원은 지난 1월, 인증원이 개발하고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인증을 획득한 세계적 수준의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인증원 전문조사위원의 공정한 조사를 받았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시설 위생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는 병원들 스스로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올해 약 200여개의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완료를 목표로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매달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결과를 공표해 각 의료기관의 인증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 2012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평가, 90% 이상 만족 (3. 27)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에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호자 94.3%, 아동 91.4%, 참여 의료진 88.1%가 만족했다고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는 학생들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서울시 건강지킴이 5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개 자치구(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동구) 초등학교 4학년생 2만명과 저소득 아동 1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12년도 대상이었던 6개 자치구 4학년 학생(현재 5학년생) 1만8000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서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1만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는 단순 1차 진료뿐 아니라 구강건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질환치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원(주치의)을 선정, 등록한 후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포한 문진표를 작성한 뒤 가정통신문에 안내된 치과의원을 방문해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지역아동센터 등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평가인증 못 받은 의대 폐쇄 위기 (3. 27)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대를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서남의대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6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개설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평가인증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 5조와 제7조에 따라 국가면허를 발부하는 학문분야인 의학·치의학·간호학·한의학 등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한국교육개발원(의평원)이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폐교조치 될 가능성이 커 법안 통과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최근 서남대 부속 병원, 관동의대와 같이 교육기관에서 설립자나 이사장이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행위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국민 여론 수렴 (3. 27)

정부가 암, 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하고 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수립을 위해 4월 한달간 ▲현장간담회 ▲인터넷 참여 ▲우편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보장 요구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간담회는 총 6차례에 걸쳐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학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4월 첫째주부터는 복지부 홈페이지·페이스북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토론폰’에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의견청취 코너를 운영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18개)를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서면 조사도 벌인다.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과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집중하기 위한 설치기구로, 의료보장반(4대 중증질환 담당)과 의료제도개선반(3대 비급여 및 의료체계 개선 담당)에 6개 세부팀으로 구성된다. 추진본부는 6월중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보장성 강화 요구 조사, 비급여 의료비 실태조사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 건강보험 이의신청, 60%는 보험료 관련 (3. 2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전년(2970건) 대비 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이며, 보험료는 전년 1659건(55.9%)보다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양상이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직·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권리구제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건보공단 勝 (3. 28)

대법원이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줘 주목된다. 의사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임의적으로 판단해 처방했다더라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서울대병원과 건보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조치에 따른 진료비지급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어느 경우이든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요양기관은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된다”며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자 등에 대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의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이 사건 원외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5건의 처방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을 다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적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병원측 손을 들어줬고, 고등법원은 5건에 대해서만 병원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실상 공단이 승리한 판결이었다.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은 서울대병원이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인 지난 2001년 6월~2007년5월 보험급여 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을 발급하자 공단이 40억원44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은 현재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51곳, 305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판결은 병원 수와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싹호탄이 될 공산이 크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원외처방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번 판결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공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보험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결로서 기본적으로 상식과 순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의협 “원외처방 폐소? 헌법소원·청구대행 중단으로 대응” (3. 28)

대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원심파기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헌법소원과 함께 청구대행 중단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노 회장은 지난 28일 제17차 울산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두고 의사가 먹지도 팔지도 않은 약값을 환수하는 건 돈을 가진 공단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에 노 회장은 헌법소원과 청구대행 중단 투쟁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둘러야 했는데 마침 이슈화가 됐다”면서 “서울대병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구대행 중단’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했다. 청구대행 중단이란 환자에게 외래 30%, 입원 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받고 나머지는 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지급받던 현재의 방식 대신 환자에게 진료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이다. 즉, 현재 환자와 공단의 편의를 위해 의사들의 몫으로 남겨뒀던 ‘청구’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주장이다. 노 회장은 “정말 우리에게 명분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체행동은 파업이 아닌 청구대행 중단”이라며 “병의원 문을 닫는 파업은 실패한다. 현장에서 환자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청구대행 중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저항수단이 없다”며 “정부의 횡포는 그들이 돈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돈을 가졌다는 이유로 심사를 하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 대행하고 있는 걸 중지해야 한다. 이걸 하루만해도 성공할 수 있다”며 “더욱이 이 방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으로부터

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연내 의료법인제도 개선방안 도출 (3. 28)

보건당국이 그간 의료법인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미친 공과를 검토하고 의료법인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세계혜택과 재정지원·용자, 개방병원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가칭 '공익의료법인' 도입이 추진된다. 28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의 공공성 제고방안 수립 연구' 용역과제에 따르면 최근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의료법인 등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과제를 발주하고 연구기관 공모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는 지역별 의료격차, 의료자원의 수급불균형, 의료의 상업화를 야기해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제약돼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부문의 의료기관 설립주체 중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대표하는 의료법인 등의 공공성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분야는 우선 의료법인 제도 등의 도입배경과 운영경과를 검토해 제도운영의 문제점 발굴과 향후 역할·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국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법과 세법 등 제도개선에 필요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칭 '공익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필요 시 공익의료법인의 정의 및 운영체계, 공익적 테스트 실시에 대한 시행 안도 함께 제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실태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으로 의료법인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의료법인 관리체계 구축과 비영리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려 - 토요일가산 시간 확대 6월 논의, 마취초빙료 180% 인상 (3. 29)

의원 토요일가산 개선방안이 오는 6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재상정된다. 건정심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토요일가산 개선안은 6월 재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모든 진료과에 일괄적으로 18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진료환경 개선과 관련 건정심 위원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은 했으나, 국민부담 증가, 야간진료 불편 해소와 만성질환 치료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일부 의견에 따라 구체적 방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6월 본회의에 재상정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결핵진단검사의 일종인 액체배지 검사에 대한 수가를 신설했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계획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보험료를 결정에 관한 건을 보고·논의했다. 결핵진단검사 보험급여 적용은 지난해 10월 건정심에 논의됐던 결핵조기진단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의결한 것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결핵 판단까지 8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고체배지 약제감수성검사 대신 일주일이 소요되는 액체배지 약제감수성검사의 수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35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계약 시기는 올해부터 5월 말(기존 10월)로 앞당겨진다. 이 논의는 예산 논의 시점과 보험료를 적용 시기의 차이로 국고지원금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회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토요일무가산제 연기된 것뿐...성과 있다며 초재진료 인상 등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의협은 희망없는 건정심을 영구탈퇴하고 전면파업투쟁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2. 보건의료산업/기술

○ 경남도민 70%,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 (3. 11)

경남도민 절반 이상이 도청측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사회동향연구소(STI)에 의뢰해 지난 9일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70%가 '폐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65.4%는 '의료원 폐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고 경상남도가 지역주민이나 병원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폐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65.7%가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66.9%가 대선기간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을 냈던 박근혜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희 의원은 "도민의 의사가 분명히 밝혀진 만큼, 진주의료원을 폐업키 위해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폐기조치해야한다"면서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5년 전 신축한 진주의료원은 신축공사비 등으로 270억원을 부담해 279억2100만원의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 2월 강제 폐쇄됐다.

○ 복지부, 의료기기 해외종합지원센터 구축 추진 (3. 13)

해외의 국산 의료기기 A/S(사후 관리 서비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 국내 중소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지원을 위한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3월 중순 사업자 공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현지 거점형 A/S 지원센터로, 정부-기업 매칭 시범사업으로 설립된다. 복지부는 올해 2개소(2개국)를 구축할 계획이며, 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연간 총사업비의 80% (개소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3년 동안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해외 현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A/S지원 ▲현지 사용자(의사) 대상 국산장비 사용 교육 ▲국내 중소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인큐베이팅(현지 수입업자 등록을 통한 현지 대리인 역할 수행) 지원 등이다.

○ '2013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6개 의료기관 신규 선정 (3. 14)

신생아용 중환자실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6개 의료기관을 신규 선정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에 병원당 10병상을 추가 확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경기),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경기), 건양대학교병원(충남·대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경북·대구),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경남·부산·울산), 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광주) 등 5개 지역 6개 병원이다. 이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을 말한다. 정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대학병원급 지원대상기관이 없는 경우 권역내 대학병원과 연계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복지부측은 "현재까지 정부 지원으로 18개 기관에 신생아집중치료실 180병상이 확충됐다"며 "금년도 6개 기관 50병상이 추가 확충 예정임에 따라, 신생아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의약품 수출 일본·베트남·중국 순 (3. 15)

지난해 의약품 수출국 1위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베트남, 중국, 터키 순이었다. 14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20억4949만 달러를 기록했다. 생산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7.7%에서 지난해 14.4%로 증가했다. 수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일본으로 3억75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어 베트남(1억4400만달러)과 중국(1억3700만달러) 2와 3위를 달렸다. 터키, 미국,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독일, 이탈리아 등도 10위권안에 들었다. 여전히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원료의약품 중심으로 수출됐다. 중국은 자국 업체들의 원료의약품 수준이 높아져 중국으로의 원료의약품 수출은 1.9% 성장(전년 대비)에 그쳤다 원료의약품 수출액은 16.4% 성장한 10억 5546만불, 완제의약품 수출은 17.4% 성장한 9억9403만불을 기록했다. 아직 원료의약품 수출 비중이 높지만, 완제의약품 수출 비중도 2000년 24.0%에서 작년 48.5%까지 크게 높아졌다.

○ 제약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 (3. 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은 3월부터 제약기업 실무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KOHI 글로벌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제약기업 해외진출 실무자 과정' 2회, '제약기업 관리자 전략과정' 1회로 구성돼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약기업 해외진출 실무자 과정'은 ▲제약산업의 Vision과 발전전략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사례 ▲제약산업 해외진출 프로세스 실무 ▲국제 계약서 유형 및 구조 ▲글로벌 제약 특허 및 허가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약기업 관리자 전략과정'은 8월부터 ▲해외사업 개발전략 ▲해외 의약품 특허 전략 ▲국제 상사 중재법 및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 복지부, 유전자 검사기관 관리 강화 (3. 19)

친자 검사 등이 시행되는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나갈 방침이며, 위법사항 발견 시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란 개인의 유전자 또는 유전체 등을 분석해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개인별 맞춤의료 서비스로, 현재 전국 약 160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제약, 통신사 등 많은 업체가 해당 분야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활용 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학적·윤리적 검증이 필요한 분야로, 최상위의 개인정보인 유전정보가 유출될 경우 취업, 보험가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 복지부, 신약개발 전문 특수목적법인 설립 검토 (3. 21)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구상한 특수목적법인은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제도의 개발 및 개선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부는 기존 정책자금 투융자 외에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신규 자금 조달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오와 제약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산업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며 "장기·고위험으로 인한 바이오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자금 난제에 특수목적법인 등의 새로운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삼성서울병원, '브랜드스타' 10년 연속 1위 (3. 22)

삼성서울병원이 '201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종합병원부문 1위에 10년 연속 선정됐다. '201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는 브랜드증권거래소가 180개 분야 700여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개월간(지난 1~2월) 모의주식거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브랜드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조사에서 종합병원부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부문에선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세계 최초, 최고 수준 의료기술 20가지를 개발하겠다는 삼성 글로벌 프론티어 20*20을 선언한 것 등이 브랜드 1위 병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3. 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지역거점 공공

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백근 경상대 의과대학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지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기인한 적자 보전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육성, 발전 및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의료원 운영정상화를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 등 경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경상남도 도의원은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200억원의 신축이전을 위한 국비를 투입했고, 지난 5년간 28억원의 국비를 투입했다. 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복지부가 인정하고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국고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 폐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폐업할 수 없고 반드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지방의료원에 수익성을 갖대로 들이대는 평가는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지원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공공의료가 축소되서는 안되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로 지방의료원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 이전에 지역주민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며 “다만 무조건 지원을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인지는 고민해볼 문제이다.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대 구로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10곳 지정 (3. 26)

서울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등 10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이다. 지정기간은 3년(2013.4.1.~2016.3.31)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에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진료중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부처간 협의를 완료했다. 이 밖에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연구중심병원을 추가지정할 계획이나,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정 후 취소절차를 갖추어 적정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정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 2013 줄기세포·재생의료 국제 컨퍼런스 (3. 27)

“보건산업이 창조경제 시대를 실현하는데 주축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27일 '2013 줄기세포·재생의료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진영 장관은 “정부는 줄기세포·재생의료에 대한 R&D 투자를 601억원(2011년)에서 1007억원(2013년)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보건산업이 창조경제 시대를 실현하는 데 주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국내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은 원천 기술이 부족했다”며 “이번 컨퍼런스 같은 국제협력을 위한 자리에서 각국의 연구를 공유하고 환자들이 희귀·난치질환을 극복하는 데 연구자들이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능동적인 줄기세포에 관한 글로벌 협력을 위해 추진된 컨퍼런스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미국 NIH 재생의학연구 소장 Mahendra Rao 박사 등 국내외 400여명의 연구자가 참석했다. 이날 미국 Rao 박사, 일본 Nakatsuji 박사, 아일랜드 Barry 박사 등 저명한 연구자들이 각국의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및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다양한 주제의 학술 및 전략 포럼이 진행됐다.

○ 삼성화재, 국민연금폐지운동 단체에 월 천만원씩 지급 (3. 26)

민간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가 국민연금의 폐지운동을 벌이는 납세자연맹에 5년간 매월

800~10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연맹은 삼성화재의 연금보험과 자동차보험 광고메일을 회원들에게 발송해주는 등 홍보비용 대가로 이 돈을 받아왔다. 납세자연맹의 전 회원관리팀장인 A씨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3억8000만 원의 홍보비를 납세자연맹에 지급했다. A씨는 "주로 자동차보험이 위주였지만, 2011년엔 삼성화재 연금보험 홍보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월 3~6회씩 회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냈고,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 등을 통해서 삼성화재의 보험상품을 홍보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4일 납세자연맹과 제휴 관계가 보도되자 지난주 계약을 해지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광고 계약을 할 당시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삼성화재가 돈 800만 원을 주고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결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상품 광고메일을 보내주는 정상적인 마케팅 제휴를 맺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3. 제약업계

○ 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무더기 사법 처리 (3. 10)

동아제약으로부터 최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이 사법 처리됐다. 또 의사 1300여명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이 만든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또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전담수사반에 따르면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금품을 받았고,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을 받은 의사들도 있었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1300여명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지난 2011년 4월 출범한 이후 총 208명을 기소했으며, 행정처분 통지 대상은 6100여명에 달한다.

○ 전의총, 종로·청주·부산 약국 전수조사 (3. 11)

전국 의사총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소재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서울 종로구와 부산광역시 2개 구(부산진구, 남구), 충북 청주시(상당구와 흥덕구) 소재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의총은 "각 지역 약국 목록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명단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707곳의 약국 중 221곳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31.3%라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높은 빈도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는 224건으로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가 218건, 낱알판매는 5건, 임의조제는 1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종로구 소재 156곳 중 47곳(30.1%), 부산시 부산진구 177곳 중 63곳(35.6%), 부산시 남구 104곳 중 30곳(28.8%), 청주시 상당구 120곳 중 32곳(26.7%), 청주시 흥덕구 150곳 중 49곳(32.7%)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루트를 통해 제보된 바 있는 부산진구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의총은 설명했다.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고발했던 24곳 중 11곳에서 또 다시 불법행위가 반복됐음이 확인됐다.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가 되는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고발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협, 동아제약 사기죄로 고발 검토 (3. 12)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를 일체 지원하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1

일 저녁 긴급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회원들의 보호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한 회원이 혼재돼 있다”며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달리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쌍벌제 이전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협에 처한 회원과 동영상 강의 피해 회원의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 측에 합법·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 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기준이 모호한 완전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들은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 日, 일반약 인터넷 판매 현실화되나? (3. 12)

일본 정부가 일반약의 인터넷 판매 승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인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개혁회의가 일반약의 인터넷 판매를 전면 해금해달라고 후생노동성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여론이 양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일본 대법원은 부작용의 강약에 따라 분류한 3가지 등급의 의약품 가운데 1, 2등급의 인터넷 판매를 일괄 금지한 정부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해 반대론자들을 무색케 한 바 있다. 규제개혁회의는 인터넷 판매가 금지되어 있던 1, 2등급의 일반약에 대한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약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상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터넷에서의 취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핑계하에 규제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2012년 제약업계 영업실적 비교 - 수익성 떨어져 (3. 14)

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 매출액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가 12월 결산 국내 47개 상장 제약사의 ‘2012년 누적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누적 매출액은 9조7180억원으로 겨우 전년(9조6236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수익성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6400억원으로 전년(8178억원)대비 -21.7%, 순이익은 4898억원으로 전년(6001억원)대비 -18.4%를 기록했다. 47개 기업 중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5곳에 달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 시행된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수익성 측면에서 선방한 기업들은 신제품 혹은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비아그라의 제네릭인 ‘팔팔정’ 등 신제품을 다수 출시해 신규 매출을 확보했고, 휴온스는 수탁사업 등에서 수익을 이끌어 냈다. 또 동성 제약은 염색약 사업에 매진해 수익성 악화를 타개했다.

○ 4월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 대폭 강화 (3. 22)

오는 4월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 적발시 ▲가중처분 기간 연장(1년→5년) ▲제공사 업무정지 기간 확대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 수수액과 연동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자(업체)는 의약품·의료기기 수입자가 1차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는 등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늘어나며, 3회 반복 위반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의사, 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는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에는 벌금액과 연동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수수액에 따라 법원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기존에는 없던 수술자에 대한 가중처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감경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4. 의업단체

○ 치과병원협회 신임 집행부 발표 (3. 14)

대한치과병원협회가 14일 새로운 집행부를 발표했다. 2년 임기의 신임 집행부는 우이형 협회장을 비롯해 김명진·백광우·조규성·김상철 부회장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열린 14차 정기총회에서 우이형 협회장 연임을 결정한 치과병원협회는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와 더불어 회원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치과계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한의사협회 첫 직선제 회장 탄생 (3. 14)

115년 역사의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사상 첫 직선제 회장을 탄생시켰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전 9시부터 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표작업을 진행한 결과, 총 유효투표 수 6442표 중 3581표(득표율 55.59%)를 획득한 기호 4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제41대 한의협 회장과 수석부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한의협을 이끌어 나갈 김필건 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훼손된 한의사의 면허권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당당한 한의계를 만들겠다 ▲한의계를 확 바꾸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 강순심 간무협회장, 정부 개편안 강력 추진 의지 표명 (3. 17)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과 같이 (간호조무사를) 제대로 양성하고 관리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은 16일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간호사들의 반대 서명 등 간호인력 개편안 논란과 관련 “그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될까 침묵을 지켰다”며 “앞으로 일부 잘못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국민에게 간호인력 개편의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 의협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반대” (3. 2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교육을 목적으로 국내 병원에서 연수중인 외국인 의사들에게 의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을 위한 고시’와 관련,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갖춰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 고시안을 제정해 실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등을 포함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 의사가 전공의 등 국내 의료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소지 ▲연수 기간에 따른 연수비자 문제 ▲적정 연수 참가 인원에 대한 기준 ▲연수 주관기관 및 연수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기준 ▲연수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 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내 선진 의료기술을 알리고 해외 의료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의료연수 본연의 취지는 최대한 달성하되, 외국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불안과 불신, 저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 약사회 조찬회 회장, 5월 수가협상 연기 요청 - 복지부 검토 중 (3. 22)

대한약사회(이하 대약) 조찬휘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오는 5월로 예정된 수가협상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주목된다. 대약과 건보공단은 이 자리를 통해 약계 전반적인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정책제안을 해 가기로 했다. 조 회장은 “2013년도 수가협상 부대 합의사항인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새 집행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며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건보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외 홍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2014년도 약국 보험수가계약 체결과 약국의 부당이득금 분할 납부 방안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서의 약사·약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단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5월로 예정된 수가협상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과 약사회는 2014년도 보험수가 계약체결 시기가 5월말로 예정돼 수가계약 협상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및 계약 시한을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부가 결정하면 수가협상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수가협상은 계약만료일(12월31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면 됐기 때문에 매년 11월 계약을 체결해왔으나, 복지부는 예산편성 시기인 6월과 시차가 있어 국고 지원 규모를 예측하는 데 오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수가 계약을 앞당기도록 했다.

○ 의약계, 쌍벌제 개선 의·산·정 협의체 구성 제안 (3. 28)

한국제약협회는 27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쌍벌제의 근간을 이루는 약사법, 의료법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허용범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제약계와 의료계가 의약발전을 위해 협력의 동반자로 제약 및 의료현장에서 건전한 의약품 정보 교환 등 활발한 교류가 전제돼야 하는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 라인 부재와 제도의 모호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확립하면서 의료계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제약계,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 의협 한방특위, 임산부 ‘고운맘 카드’ 한방지원에 경고 (3. 28)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고운맘카드’를 통한 한방 분야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한방특위는 28일 “한약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운맘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며 “이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산모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방특위는 “한약은 세계적 보편기준(WHO)인 안전성, 유효성, 질 관리의 약물사용기준을 확보하지 못해 한약사용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관리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검증된 한약 사용으로 산모의 건강권 훼손에 따른 2차적 질병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는 정서적 만족감으로 포장해 임산부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나락에 빠뜨리지 말고, 추후 임산부의 한약 간 독성 사고, 태아기형 문제, 지능저하 등의 사고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질병/기타

○ 에이즈,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다? (3. 16)

HIV 감염 후 이른 시간에 즉각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이른바 ‘기능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연구진은 HI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지 10주 이내의 치료를 시작한 초기

단계 환자들 1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상기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균 3년 동안 항바이러스 약물로 치료한 다음, 중단했으나 이후 HIV가 재발하는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HIV가 근절된 것이 아니라 HIV 수치가 떨어지며 차도를 보이는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HIV 초기 환자의 5-15%는 치료 후 기능적으로 더 이상 약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부언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플러스(PLoS) 병원균'에 게재될 예정이다.

○ 타미플루 내성 공포의 돼지독감 바이러스 컴백 (3. 20)

지난 2008~2009년 전세계를 강타했던 신종 인플루엔자 'H1N1pdm09형'이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지고 다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협력센터 연구진은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감염성질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H1N1pdm09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또 다른 항바이러스 약물인 '리렌자'에 대해서는 아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타미플루에서 내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진 H1N1pdm09는 열악한 환경과 약한 면역 시스템을 지닌 일부 지역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에이론 허트 박사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내성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2008~2009년 대유행을 상기시켰다. 박사는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진 H1N1pdm09는 아직 드물지만 확산 및 순환의 위험이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 美 의사들, 에너지 음료 공개적 비난 (3. 21)

졸음을 쫓기 위해 우리나라 학생들도 즐겨마시는 에너지 음료에 대해 미국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18명으로 구성된 의사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FDA가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FDA에 보낸 서한에서 "에너지 음료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공격하면서 "FDA는 에너지 음료제조사에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음료에 들어갈 카페인 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수준이 심각한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가져온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FDA를 압박했다. 그러나 에너지 음료 업체들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제품이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FDA는 지난해 말 "이전 4년간 '5-Hour Energy' 제품과 관련해 발병, 입원, 사망한 사례 92건과 고카페인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와 관련한 사망 사례 5건도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